



관계부처합동

# 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  
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2. 1. 21.(금) 15:00	배포일시	2022. 1. 21.(금) 즉시 배포
담당부서	대검찰청 공공수사부, 형사부	담당자	노동수사지원과장, 형사3과장 (☎ 02-3480-2340, 4964)
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		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(☎ 044-202-8950)
	경찰청 형사국		강력범죄수사과장 (☎ 02-3150-2770)

## 대검찰청 · 고용노동부 · 경찰청 「수사기관 대책협의회」 개최

- 대검찰청·고용노동부·경찰청은 2022. 1. 21.(금) 「중대재해 처벌법」 시행에 대비하여,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수사기관 대책협의회」를 개최하였음
-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(LIFE-LINE)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'중대재해 예방' 및 유해·위험 요인을 방치·묵인하여 중대 재해를 야기한 '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'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,
- 이를 위해 △「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」 운영 △「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」 정립 △「안전사고 전문위원회」 설치 △「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」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
-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,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 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음

## ① 개최 배경

- '22. 1. 27.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
-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,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「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」 정립

## ② 개최 요지

- 일시 및 장소
  - 2022. 1. 21.(금) 14:30~15:30, 대검찰청 15층 회의실
- 참석자 (10명)
  - 대검찰청 : 공공수사부장, 형사3과장, 노동수사지원과장, 검찰연구원
  - 고용노동부 :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, 사무관
  - 경찰청 : 형사국장,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, 수사연구원
- 그간 「실무자급 협의회」 논의 내용
  -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, 법률해설서 자료 공유,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,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
  -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분야 범리검토 자료 공유를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

### 3 주요 내용

중점 목표 : ① 중대재해 예방, ② 중대재해 사범 엄정 대응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‘중대재해 예방’
  - ‘안전한 작업환경’ 등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·수사 활동을 강화하고, 중대재해처벌법상 ‘안전보건관리체계’ 구축·이행의 토대 마련
  - 안전대(LIFE-LINE) 등 안전장비를 제공·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하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
- 유해·위험 요인 방치·묵인한 ‘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’
  - 경영책임자의 유해·위험 요인 방치·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,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‘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’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

#### 「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」 운영

-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,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고,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의 복잡성 등으로
  -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다수 유관기관(검찰, 고용노동부, 경찰, 산업안전공단 등)간 소통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
- 향후 「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」를 구성하여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, 수사의 신속성·효율성 제고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공감

## 「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」 정립

### ○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

- 중대재해 사건은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증거 멸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,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 협력 필요

※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중복 수사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‘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’ 논의 예정

### ○ 중대재해 수사체계 정립

-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·입건·송치·공소유지에 이르기 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·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 하고,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 정립

## 「안전사고 전문위원회」 설치

### ○ 고용노동부·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「안전사고 전문위원회」를 설치·상설 운용

- 중대재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수사·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 안전 사고 전문가 공유

## 「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」 협력체제 구축

### ○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 구축

- 수사기관별 ‘중대재해 전담책임자’를 지정하여 연락체계를 구축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

※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,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·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(지검 또는 지청)에 송치 ☑